



5·18 열사묘역 벌초 추석 연휴를 9일 앞둔 2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벌초가 진행되고 있다.

23년만에 5·18민주묘지 추석연휴 참배 중단

삼우제·49제 등은 사전예약 받아 제한적 허용...연휴 이후 정상운영

국립5·18민주묘지가 완공 23년만에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기간 운영을 중단한다.

국립5·18민주묘지는 22일 참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온라인 참배 서비스를 시행하고 오프라인 참배는 중단한다고 22일 밝혔다.

추석 연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결정이며 이 기간 야외묘역, 추모관, 유영봉안소, 대기실, 휴게실 등 실내 편의시설 등도 모두 중단한다.

다만 묘역의 현장 참배에 대해서는 기일, 삼우제, 49제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22일부터 29일까지 사전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안장과 이장 등 현장업무는 정상적으로 운

영되지만 국립묘지로 이장은 중단된다.

민주묘지는 유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 추모관'을 운영할 방침이다. '온라인 참배'와 '추모의 글쓰기' 등이 가능하다.

또 사전신청을 받아 민주묘지 직원들이 민주유공자에게 헌화, 참배하는 사진을 찍어 유가족에게 전송하는 시스템도 운영한다.

국립5·18민주묘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립묘지가 1997년 5월 완공이후 23년 만에 처음 운영을 중단한다"며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많은 유족들의 양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월 24~27일 설 연휴기간 민주묘지에는 7000여명의 참배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서선옥기자

'꽉 막힌' 광주 자치구 경계조정 문제

2018년 11월 최종보고회 후 22개월째 제자리 걸음

내달 3일 광주시장·광주지역 국회의원들 회동 촉박

광주지역 현안과제 중 하나인 자치구 경계조정 문제가 3년째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 해결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민과 정치권 반발, 소극적 행정에 코로나 19까지 4중 장애물을 막혀 한 발 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조만간 회동할 예정이어서 모책을 찾지 관심이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의는 지난 2014년부터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돼 오다 2017년 1월 구정장협의회에서 구체화했으나 반대 여론이 일면서 이듬해 11월 최종보고회 이후 2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2018년 1~11월 1억3700만원을 들여 연구 용역까지 마쳤으나, 실제 적용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기획회의와 자문회의, 시민 설문, 이해 관계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3개 안이 확정됐고, 그 가운데 시민 선호도가 38.8%로 가장 높은 중포(중규모) 조정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중포 개선안은 북구 다선거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침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안이다.

북구 가선거구인 중흥 1·2·3동, 중앙동, 신

안동, 임동과 다선거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 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광산구 침단1·2동을 북구로, 광산구 나선거구인 월곡1·2동, 운남동, 신흥동, 우산동을 서구로, 서구 풍암지구를 남구로 편입하는 대폭 개편안보다 상대적으로 덜 흔드는 방안이다.

북구 다선거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 1·2·3,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시키는 소폭 개편안이 지역 갈등 최소화나 무등산관리 일원화 등의 장점은 있는 반면 전반적으로 조정 규모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에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던 경계 조정은 그러나, 북구·광산구 지역주민과 구의원, 단체장 등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하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최종안이 도출되면 기본계획 수립과 자치구, 시·구의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이후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하겠다는 광주시의 당초 로드맵도 울스름했다. 시민들의 66.5%가 동의하는 경계조정 문제에 '광주시가 지나치게 눈치보기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구 중흥1·우산·풍

향·두암3동 일부를 동구로, 동구 산수1·2동을 북구로, 북구 동림동·운암1동 일부를 서구로, 남구 방림2동 일부를 동구로, 서구 송원학원 부지를 남구로, 서구 광천동 일부를 북구로 조정할 2011년 10월 경계조정에 비해 다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4·15 총선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이해 관계가 달하고, 지방선거가 2년 남게 남아 있어 경계조정 공론화 적기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 역시 흐지부지 기회를 놓쳤다.

지역 정·관가 일각에서는 "시·도 통합이라는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리는 사이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묻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내부 교통정리가 우선되거나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용섭 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추석 이후 다음달 3일 회동할 예정이어서 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찬반 의견 교환과 정치적 조율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정치권과도 매우 민감하게 맞닿아 있는 사안이어서 선불리 결론 내리긴 쉽지 않다"며 "내달 3일 시장과 국회의원들 간 만남에서 큰 틀의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기준으로 광주 북구 인구는 43만6188명으로 전체 시민의 29.8%를 차지한 반면 동구는 9만8642명으로 6.7%에 불과하다. 인구수로는 4배 차이다.

김민정기자



신안군, 가거도 건강증진센터 개청

24시간 응급실 운영 의사 4명 등 의료진 9명 배치...건강증진 강화

신안군은 흑산면 가거도 주민의 건강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지소를 건강증진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21일 개청식을 가졌다

가거도 건강증진센터는 367㎡의 건축면적에 지상 3층 규모로 일반의과·치과·한의과 진료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응급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는 의사 4명을 포함한 9명의 의료인력이 다양한 의료 및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거도 건강증진센터는 당직의료기관으

로 지정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해 병원 전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혈액검사, 방사선 촬영장치, 원격협진장비 등 검사장비 및 인력을 확충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된 만성질환관리, 운동교실, 보건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도 추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허균 <도문대작>

